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연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5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7.

발 의 자 : 최연숙 · 이인선 · 김상훈
김예지 · 이태규 · 양향자
장은미 · 권은희 · 최승재
金炳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.

노인들은 고령화가 될수록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이 직접 자신의 정책에 참여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도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에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,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3 신설 등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노인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강화,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노인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노인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노인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·취소,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”를 “구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의3(노인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강화,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노인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노인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노인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·취소,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p>第7條(老人福祉相談員) ① 老人의福祉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老人福祉相談員을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第7條(老人福祉相談員) ① -----구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